

여·야국회법 뇌관... 윤 대통령 거부권 시사도

여 반발·야 법안 강행 공방

강대강 대치, 정국경색 우려

조승천 의원, 이번주 법안 제출

국회 원 구성 문제로 극한대치를 이어가던 여야 간 전선에 급작스럽게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뇌관이 더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천 의원이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위헌소지가 많

다"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가뜰이나 얼어붙은 정국이 국회법 공방으로 한층 경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추진하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법안을 공동발의할 의원들을 찾고 있으며 이번,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해당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까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만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 거부권 문제까지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번 법안이 그만큼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권의 반발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대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선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행정부가 정하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자주 모범을 위배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 권한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며 "삼권분립이라는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걸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

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며 권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통령 한동훈'을 위해 제멋대로 시행령을 뜯고 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준 것이 누구냐. 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인사정보관리단이야말로 위헌 조직"이라며 "국회가 정당한 권한 행사를 위해 정부 독주를 막겠다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고 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로 정국의 실타레가 더 꼬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 문제, '정문회 패싱' 문제의 해법을 여야가 좁혀잡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충돌로 강대강 대치가 한층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집권여당 원내대표 사퇴 등을 불러온 휘발성 있는 사안을 민주당이 무조건 강행하기에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회 동시지방선거 호남 당선자 축하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전대 룰 전쟁 심화 대의원·당원 비율 '밀당'

친명계 "반영 비율 조정해야"

친문계 "본질적 변경은 안 돼"

이상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며 사실상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시작됐다.

비대위가 8월 말 새 지도부 선출을 목표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을 급선무로 꼽은 가운데 당내에서는 벌써 룰 전쟁이 격렬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핵심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다.

민주당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의 비율로 가중치를 매긴다.

대의원의 영향력이 가장 큰 셈이다.

대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는 만큼, 현재 구조는 당내 수적 우위를 점한 친문(친문재인)계에게 다소나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친명계를 비롯한 비문 진영에서는 지속해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본질적으로는 민심을 더욱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도 닿아 있다.

반면, 친문계는 수십년 간 당을 지켜 온 대의원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비문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렇듯 계파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이날 출범한 비대위와 앞으로 꾸러지게 될 전준위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호남 광역·기초의원 축하

국민의힘 이준석, 초청 행사

국민의힘은 13일 호남 지역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7명을 국회로 초청해 축하 행사를 열고 '서진' 정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개최된 행사에서 "이제 저희가 명실상부한 호남에서의 제2당"이라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 절대 호남은 소외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소위 말하는 '호남 포기 전략'의 포기"라고 밝혔다.

그는 "호남 주민이 저희에게 상당한 신뢰를 주신 만큼, 저희는 일로써 보답하는 게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이라며 전북·전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을 다짐했다.

특히 광주·대구가 공동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2038 하계 아시안게임과 관련, "김용남 광주시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아시안게임 유치를 공동으로 대구시 의원들과 함께 진행하시라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이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인실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김 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북 봉화 출신의 김 청장은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세무 전문가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국세 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근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 및 기획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20일이 지난 이달 7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 기한인 10일까지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자 이날 그를 임명했다.

김 청장은 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시한은 오는 18일로,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를 물밑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양산 사저 앞 시위 경찰 대응 항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가운데), 정태호(오른쪽),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